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오항녕 저, 일지사, 2009)

윤 훈 표\*

본 책은 2003년 한국연구원(韓國研究院)에서 간행했던 것을 출판사를 바꿔 다시 출간한 것이다. 당시 비매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에 널리 공개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재차 발간됨으로써 비로소 독자들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서평자는 원래 본 책의 주제인 사관제도라든가 실록 등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통해 저자에게서 많은 교시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으며, 더불어 본인의 전공과도 크게 관련이 없는 편이라 평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부득이 학회로부터 부름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 저자 및 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깊은 양해와 함께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다.

사관은 본 책의 서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제도상의 관료나 관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의 궁극적 의의가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기록을 통해 후세에까지 이어지기 때문

---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이다. 비록 당대에서 활동했다라도 후세의 의미를 갖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여타의 관직과 같이 간단히 제도의 설치 및 운영을 고찰하는 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근대 사회의 사관제도 성립에 관해 검토한다고 했을 때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추적하는 작업의 하나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조직의 규모도 적은 편에 속하고 관련 인원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사관의 존재 의의는 실로 막중하였다. 더구나 제도적 측면에만 국한해서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력이 한결 컸으며 그에 따른 복잡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를 성립 문제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풀어내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본 책의 출간이 지닌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크게 수정, 보완해서 펴낸 것이다. 서론을 위시하여 본문의 4장, 그리고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례

머리말 - 현재와 미래의 史官을 위하여

## 서론

1. 實錄의 시대와 史官制度
2. 觀點과 서술

제 I 장 史官制度 成立史의 몇 가지 주제

1. 역사의 종교성
2. 實錄時代의 有機的 구성요소
3. 韓國史의 史官制度
  - 1) 三國·統一新羅時代의 史官과 歷史編纂
  - 2) 史館 성립 시기 재검토

## 제Ⅱ장 文治主義의 정비와 史官制度

1. 『經國大典』 史官 규정의 檢討
2. 高麗後期 藝文館·春秋館의 官制 변화
  - 1) 藝文春秋館의 성립
  - 2) 藝文館·春秋館의 통합과 분리
3. 조선초기 文翰官署의 발달과 史官
  - 1) 藝文館의 강화와 集賢殿의 설치
  - 2) 『經國大典』 史官 규정의 성립
    - (1) 經筵의 置廢와 藝文館의 기능
    - (2) 經筵官署의 정비와 藝文館·春秋館

## 제Ⅲ장 專任史官과 兼任史官

1. 藝文館 專任史官의 職制와 운영
  - 1) 參外官 專任史官制의 기원
    - (1) 史館의 直史館
    - (2) 直史館의 品官化
  - 2) 藝文館 參外官 專任史官制의 성립
  - 3) 職制 운영에 나타난 專任史官의 독립성
    - (1) 藝文館 參外官의 自薦制
    - (2) 藝文館 參外官의 遷轉과 去官
2. 春秋館 兼任史官의 職制와 운영
  - 1) 兼任史官制度의 발달

- (1) 史館의 兼任史官
- (2) 監館事 체제하의 兼任史官
- 2) 兼任史官制度의 整備와 實錄 編纂官
- (1) 官職 중심의 兼任史官 運營
- (2) 實錄 編纂官의 兼任 官職
- 3) 『經國大典』의 兼任史官 규정과 그 실제

#### 제IV장 記事와 편찬

- 1. 專任史官과 記事: 職能의 수렴
  - 1) 고려후기 史館 參外官의 직능
  - 2) 史官과 近侍
    - (1) 兼職을 통한 獨自의 功能의 端緒
    - (2) 兼職에 의한 自立性의 退行
    - (3) 近侍와 記事史官
- 2. 記事와 編纂의 二元性 극복
  - 1) 記事와 史草
    - (1) 史官과 史草
    - (2) 史草와 日記
    - (3) 時政記 編纂의 실제
  - 2) 實錄編纂의 公的 구조
    - (1) 宰相 중심의 實錄編纂
    - (2) 編纂主體 논쟁의 성격
    - (3) 實錄廳 체제의 實錄編纂

#### 결론

#### ■ 부록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위에 서술된 차례만 언뜻 보아도 사관의 성립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비와 구성, 기능과 역할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각장별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서론에서는 본 책의 연구 대상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행하며 저자의 문제의식과 서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 책의 구성 및 핵심적인 검토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국가의 정치체도로 나타난 사관제도와 사관의 기록 및 편찬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록의 시대’의 사관제도 발달을 논제로 삼았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그 출발은 중국 당나라 역사가 유지기(劉知幾)가 지적했던 실록 편찬의 과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라는 것이다. 그런 점을 사관에 대해 제도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책의 문제의식이라고 언급하였다.

저자는 실록의 경우 기록자와 편찬자가 각기 다수이기 때문에, 또 기록과 편찬의 주체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동시대에 양자가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발생하는 내재적 긴장이 있게 마련이었다고 한다. 이는 실록이 당대사(當代史)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이 내재적 긴장을 극복하는 길은 제도와 사상, 정치문화의 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본 책에서는 제도의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사관제도사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에 언급했던 부분은 본 책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면서 저자

의 일련의 작업에서도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저자가 하고 있는 작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싶다.

주지하듯이 실록은 선대 임금의 업적을 후임자들이 정리한 것이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 기록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편찬하면 혐의도 피하고 부담도 줄어 들 것인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서둘러 간행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는지의 이유가 궁금하다. 아마도 이 점이 당대사로서의 실록 출간 및 그 일을 맡았던 사관의 존재 의의가 특별해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라고 할만하다. 본 책을 읽어 가는데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제 I 장에서는 사관제도 성립사에 관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저자는 본 장이 책의 실질적인 서론에 해당된다고 언급하였다. 즉 사관제도의 성립을 언급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사관이라는 관직을 왜 만들었는가의 문제라고 이해된다. 물론 이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적절한 해답을 얻었는지가 본 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최초로 성립하게 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을 때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중국의 관련 사료 및 연구 성과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유지기의 이론을 받아들여 문자를 통한 기록과 사관이라는 관직이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것이 사관제도의 시초를 언급한 말이자 사관제도의 전체 역사를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거기서 발전하여 인간

의 유한성으로 인한 존재의 단절을 넘어서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그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해당 사회와 문화생활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궁극적으로 종교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중국 고대인의 경우에 자신들의 풍토에 적합하게 역사를 종교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 즉 신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대신 역사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적 토양 속에서 사관제도가 정치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국가적 역사 편찬이 일가(一家)에 속했는데 당나라를 전후한 시기에 관청에 소속된 관원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는 실록의 편찬과도 연관되었다. 그리하여 사관(史館)-분찬(分撰)-실록(實錄)의 체계가 갖춰지면서 사관제도의 본래적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위에 언급했던 틀을 한국사의 사관제도에 적용했는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추론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신라중기 신문왕대(神文王代) 이후에는 당대사를 편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최치원(崔致遠) 당시에 이르면 사관(史館)의 존재와 그 활동의 산물인 실록이 존재했다고 파악했다.

이어서 사관(史館) 성립 시기를 재검토하면서 고려시대의 사관제도의 성립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윽고 고려 이전에 성립했다는 저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문치제도의 정비와 사관제도를 다루었다. 여기서 사관이 속해 있는 기구들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였다. 사관제도를 유교적 문치주의를 추구하는 이념형 조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예문관

(藝文館) 참외관이 전임사관으로 규정되었고 춘추관(春秋館)에는 겸임사관이 소속되어 있는 언뜻 보아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해명하였다.

명칭상으로는 당연히 춘추관에 전임사관이 속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문치주의의 정비에 따른 문한관서의 변화와 연관된다며 그 연유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였다. 먼저 예문관·춘추관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고려 후기 충선왕 때의 개편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한림원과 사관이 통합되어 예문춘추관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사관과 한림원의 참상관 이상이 겸직제로 운영된 전통 위에 원나라 관제를 수용한 결과로, 직사관(直史館)과 직한림원(直翰林院)이 수찬(修撰)·주부(注簿)·검열(檢閱)로 통합된 데 있다고 한다.

충숙왕 12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어 조선 태조 원년의 관제에서도 그대로 준용되었으며 태종 원년의 관제개혁 때까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였다. 그 사이에 다소의 변화가 없지 않았는데 예문관직의 일부가 녹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후기부터 국왕의 고문으로서의 기능과 경연의 중요성이 서서히 증가하는데 따라 전문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태종 때부터 유교적인 문치주의에 입각한 문한관서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원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은 정식으로 분리되었으며 전자는 녹관으로 후자는 겸관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계기로 예문관은 전래의 임무인 외교문서를 짓는 일 이외에도 경연과 편찬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세종 때 전문적인 연구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집현전이 독립, 발전하였다.

집현전이 문한 업무를 주도하면서 예문관의 직사가 애매해졌



는데, 참외관인 봉교·대교·검열은 예문관 관원으로서의 활동보다도 춘추관 기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이후 세조 때 집현전이 폐지되고 성종 때 그 후신격으로 홍문관이 설치되는 일련의 개편 작업을 거치면서도 이들의 역할에는 변함이 거의 없었다. 곧 예문관은 참외관 중심의 전임사관의 관서로 인식되었으며, 『경국대전』에도 그렇게 규정되었다.

결국 조선초기 문한관서의 변화에는 예문관 참외관 중심의 전임사관제도와 춘추관의 겸직사관제도의 확립이라는 사관제도 내적인 변화 과정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제Ⅲ장에서는 전임사관제도와 겸임사관제도를 해명하였다. 특별히 상보(相補)와 간극(間隙)의 직제(職制)라는 부제를 달았다. 두 사관제도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임사관제도와 겸임사관제도는 본 책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많은 지면에 걸쳐 상세하게 논증하였다.

일단 두 절로 나누어 먼저 예문관에 소속된 전임사관의 직제와 운영을 다루었으며, 다음으로 춘추관 겸임사관의 직제와 운영에 대해 언급하였다. 전자가 성립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발달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단지 각각의 직제와 운영 실태를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읽어감에 있어 항상 이 문제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문관의 전임사관 경우 그 기원을 해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것은 제Ⅱ장에서도 개략적으로 언급되었던 바, 고려 충선왕 때 관제 개편으로 성립된 예문춘추관에 뿌리를 두었다. 특히 개편 이전의 사관(史館) 참외관이었던 직사관의 변모에 주목하였다. 개편을 통해 품관이 되면서 직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 뒤 몇 차례 변동을 겪으면서 사관직 관료로서의 위상이 정립

되었다. 동시에 그에 걸맞은 임용 방식도 마련되었다.

한편 고려말 사관의 입시 및 직능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예문춘추관 참외관들이 관직제도에서 차츰 독립적인 업무를 가진 존재로 되어 갔다. 특히 태종 원년의 관제개혁을 거치면서 예문관은 참외관과 참상관 이상의 성격이 서로 다른 상하 이원적 구조를 가진 관서가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참외관들이 마침내 법적으로도 전임사관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전임사관들의 자립성은 미숙한 상태였으며, 그것은 직제 운영의 변경 등을 통해 보강되어야 했다. 먼저 임용 방식에 의해서 한층 강화되었는데, 곧 자천제(自薦制)의 실시였다. 즉 동료들의 천거에 의한 임명과 ‘이차천전(以次遷轉)’, 타관 서로 옮기지 않고 차례로 승품(陞品)하도록 해서 임용 단계부터 독립성과 자립성이 높아지게 했다. 이는 재직 중에 근무 성적에 따라 승진하는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다른 관원들과 마찬가지로 고과에 의거해서 천전하거나 순자법(循資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결국 『경국대전』의 편찬 단계에서 차차천전법으로 되돌아갔다.

천거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 보다 엄격해졌다. 전임사관제가 정착하면서 사관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엄밀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였다. 사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출신 배경 등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심사하였다. 나아가 관료로서 죄를 실제로 범했는가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관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혐의조차도 결격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천제가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면신례, 즉 허참연인데, 너무 지나쳐서 신

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 몇 차례 금지하고자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 다음 절에서는 춘추관 겸임사관의 직제와 운영에 대해 검토했다. 그 발달의 출발점으로 전임사관제와 마찬가지로 고려 충선왕 때의 관제개편으로 성립된 예문춘추관을 주목하였다.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관(史館)의 겸임사관들이 충선왕 이후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먼저 사관의 수찬관급 겸임사관 중에 종5품 이하의 본직 관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계 구조에서 대부계(大夫階)와 낭계(郎階)의 구획선을 중심으로 수찬관급의 겸임사관이 운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였다. 아울러 이는 고려시대 음서제(蔭敍制)의 적용 계선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충수찬관(充修撰官)·충편수관(充編修官)과 겸편수관 사이에도 명확한 위계가 존재했는데, 대체로 정3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동지춘추관사도 공민왕 이후에는 겸임자의 관계가 종2품 봉익대부(奉翊大夫)로 조정되면서 그들의 본직도 추밀(樞密)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결국 공민왕 이후 동지춘추관사와 수찬관(충수찬관·충편수관) 사이의 관계와 관직 조정이 관료제적 질서 속에서 관직을 중심으로 춘추관의 겸임사관이 정리되고 춘추관도 관품에 따라 관서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에 들어와 겸임사관제도에 대한 정비작업이 계속되었다. 큰 골격에서는 연속성이 존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바뀐 부분도 많았다. 특히 태종 원년의 관제개혁에서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졌는데, 예문관은 녹관이 되고 춘추관은 그대로 겸직으로 운영되었다. 재상의 춘추관 겸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참서관에는 기사관(記事官)과 기주관(記注官)

이 새로이 생겼다. 그리고 5품직이 겸임사관으로 포함되었다. 다른 한편 예겸제(例兼制)가 확립된 것은 아니었으나 점차로 관직에 따른 겸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언(代言)·사인(舍人)·헌납(獻納) 등의 관직이 그것이다.

세종 때에 들어와서는 더욱 많은 관직으로 하여금 춘추관의 직사를 겸하게 하였다.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여하는 관서는 빠짐없이 춘추관의 겸임관이 되었다. 이는 모두 기사(記事)를 넓히기 위해 확대된 인원이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경국대전』의 겸임사관 규정의 기초가 되었다.

이어서 『경국대전』의 춘추관 겸임 규정이 겸임사관의 실제 운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고자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 실제로 참여한 관원들의 관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실록』 편찬 무렵까지는 춘추관 겸임사관의 관품이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세조실록』을 기점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성종실록』의 편찬 단계에서는 예겸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관원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경국대전』의 겸임사관제와 비교해서 검토한 결과 실록 편찬관의 관직 가운데 『경국대전』의 춘추관 겸임규정에 없는 것들도 발견된다. 역으로 『경국대전』에는 겸임사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록 편찬관 명단에는 발견되지 않는 관직도 있다. 대표적으로 승지는 겸임사관이면서 실록 편찬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겸임사관 중에도 기사사관과 편찬사관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실 등에 근거해 예문관 참외관을 전임사관으로 삼고, 관직을 중심으로 겸임사관을 배치하여 국사의 기록에 만전을 기하면서 실록의 편찬 방식도 기사와 편찬의 주체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갔던 것이 조선초기 사관제도의 발달 과정에 나타난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내적 긴장의 해소 또는 극복이라는 부제를 달고서 기사(記事)와 편찬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제Ⅲ장에 전임사관과 겸임사관을 제도적으로 해명하였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직능을 해명하였다.

먼저 장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관의 직제가 전임과 겸임이라는 이원적 구성이었던 것처럼 직능도 기사와 편찬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전임사관은 기사, 겸임사관은 편찬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크게 두 절로 나누었는데, 우선 전임사관의 직능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기사와 편찬의 이원성을 극복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전임사관의 직능을 고찰하기 위해 역시 고려시대의 전임사관에 해당하는 사관(史館) 직사관과 예문춘추관 참외관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들은 사관에 직속하고 포쇄(曝曬)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중요한 국정에 참여하여 기사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사관들이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고 주위의 여건이 달라지면서 입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고려 최말기 공양왕대를 거쳐 조선에 들어오면서 사관의 입시와 기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졌다. 점차로 사관의 입시가 정전과 경연에서 편전으로, 조회에서 조계로 확대되었다. 이는 사관의 기록 영역의 확대이자 전임사관으로서의 직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했다.

중간에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관 입시의 확대는 꾸준히 이어졌다. 행행(行幸)할 때에도 전례대로 수행했으며, 윤대(輪對)와 독대(獨對)에도 참여했고, 가끔 있는 종친연(宗親宴)

이나 국청(鞫廳), 관리 선발이 이루어지는 정청(政廳)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근시관으로 늘 국왕 곁에서 때때로 비서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는 곧 정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기록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예문관 참외관의 직무영역과 직능에 대한 고찰을 배경으로 사관 일반의 활동 결과인 사초 및 일기, 시정기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기사와 편찬의 이원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에 걸친 몇 차례의 관직개편으로 인해 기사사관의 중심을 예문관 참외관이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활동 영역도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작성하는 사초가 당대의 정치와 사회, 인물에 대한 궁극적 평가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으며, 사초의 관리도 그에 상응하여 대단히 중시되었다.

열람이 차츰 어려워지면서 사초를 국정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강구되었던 것이 『경연일기』와 『승정원일기』다. 경연에서 학문적인 토론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관도 입시하면서 『경연일기』가 사초에 버금가는 기록으로 인식되었다. 이때 경연을 담당하는 홍문관의 관원이 춘추관을 겸직하면서 『경연일기』 작성을 맡게 되었다. 『승정원일기』는 겸춘추인 승정원 승지들이 아니라 당후관(堂後官)인 주서들이 기록하였다. 더불어 주서들이 사관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덧붙여 전임사관들은 「시정기」라는 이름으로 각관청의 공적 문서를 수집해서 정리했다.

예문관 참외관을 중심으로 사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록 주체와 편찬 주체의 이원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사 왜곡의 폐단을 극복했는데, 그 집약점을 실록 편찬 방식에서 찾았다. 실록

을 편찬할 때, 예문관 참외관이 중심이 되는 기사의 주체와 춘추관 영관사 이하가 참여하는 편찬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낭청과 당상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초를 비롯한 여러 편찬 자료가 편찬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관료조직의 틀 안에서도 정확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합리적인 편찬 원칙이 확립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앞의 장들에서 사관제도와 직능 등에 대해 논증하였던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동시에 저자 나름대로 본서가 지닌 의의에 대해 상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한층 돕고 있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였던 것은 실록이 당대사이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당대인들의 이해와 관점의 차이가 상존하며, 그것이 기전체(紀傳體) 정사(正史)와는 달리 당대에 노출된다는 점이 역사기록의 진실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그 진실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바로 기사와 편찬의 주체였던 사관제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는 본 책의 성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책에서 고려시대의 관직이나 그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서술된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고려시대 관직제도 일반의 차원에서 겸직제도의 운영원리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겸임사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초기 겸임사관에 대한 심도 높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실록 자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실록학(實錄學)의 수준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 책이 지닌 문제

점이 아니라 저자의 오랜 바람을 언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본 책의 연구사적 의의는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점이 많았던 사관제도의 운영체계에 대해 치밀하게 고찰해서 새롭고 중요한 사실들을 다수 밝혀냈다는 점이다. 나아가 단순히 사관제도에 대한 연구로 끝나지 않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곧 이에 근거하여 전근대 사회에서 역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편찬하고자 했는지, 특히 실록이 지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독자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먼저 책의 제목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라고 했을 때에는 언뜻 보기에 한국사 전체에서 사관제도의 성립을 다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실제로 시기적으로는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에 이르는 사관제도에 대해 주로 논급하였다. 그 이전 시기의 사관제도는 사료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로 말미암아 다소 개략적으로 처리했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를 대고 있지 않다.

이어서 성립에 관한 문제다. 본 책의 서술 내용은 사관제도의 성립만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많은 부분이 제도의 정비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채워져 있다. 아마도 저자는 ‘성립’에 제도의 정비라든가 운영 사항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본문 장절의 제목이나 구성, 실제 서술 내용 등에서 ‘성립’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생각이 서로 차이나 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사관제도의 성립에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주제, 이



른바 역사의 종교성에 관한 문제다. 본 책에서는 간단하게 서술되었지만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왜 중국과 한국은 특이하게도 정치기구로서 사관제도를 성립해서 운영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가 종교적인 위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존송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과연 그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방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나아가 그런 점이 정치기구로서의 사관제도를 성립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관해서도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설사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중국이 아닌 한국의 사관제도 성립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바가 많다.

한국의 사관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고스란히 이식되었다고는 저자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관제도가 성립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가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세밀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곧 바로 실록의 편찬 문제와도 연관된다. 중국에서 실록이 편찬되는 시기에 사관제도의 큰 변화가 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도 적용되어 통일신라시대 실록의 편찬과 함께 사관제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추론이 많을 수밖에 없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중국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정작 한국에서 그 시점에 중국식 사관제도를 받아들여 무엇 때문에 실록을 편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묘사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자료상의 근본적 한계로 어쩔 수 없지만 본 책은 원래 한국 사관제도의 성립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자연히 그에 대한 심도 높은 해명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전임사관은 기사, 겸임사관은 편찬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본 책의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사관의 직제를 전임과 겸임의 이원적으로 구성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궁극해진다. 언뜻 보기에 겸임사관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상보(相補)와 간극(間隙), 내적 긴장의 해소 또는 극복, 그리고 기사와 편찬의 이원성 극복도 겸임사관의 직제 조정으로도 가능할 듯싶다. 그럼에도 이원적 구성을 필요로 했던 것은 그 이외의 좀 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렵지만 이원적 구성의 지닌 의미에 대한 찬착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 문치주의 등과 관련해서 몇몇의 의문이 더 있지만 본 책은 저자가 계획하고 있는 삼부작(三部作) 중의 하나라고 하기에 전체가 나온다면 저절로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앞으로 30년간의 장기적인 집필 계획도 세워놓았다고 하므로 그것이 전부 달성되기를 많은 독자들과 함께 기대하며 소망한다.